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2. 1. 12.)

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위해제품에 대한 조기 관찰 및 집중 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제품 유통·판매 이력 등을 활용하여 위해제품을 시장에서 퇴출 추진할 계획이다.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 **「'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」을 추진할 예정**이다.

  ※ 관련 근거: 「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」 제3조(안전성 조사 계획수립)

-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**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, 적발제품 후속관리, 불법제품 차단강화**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**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**하였다.

– (1) 정부 안전성조사 통계, (2) 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, (3) 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(API)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및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

– 위해제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,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하고,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 차단

❖ 2021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

① 제품의 유통·판매 데이터 등에 기반한 위해제품의 선택과 집중 조사

– 일일 평균 30만 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**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(API) 활용** 기록* 을 분석하여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히 포착

* 소비자 · 유통업자 등이 API를 통해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·리콜정보 검색 이력

–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및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·판매정보(판매 순, 출시 순, 사용자 댓글 순 등)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*을 집중 조사

* (사례) ① 주요 유통매장별 안전성조사 부적합률('21) : ㄱ사(20.0%), ㄴ사(12.9%), ㄷ사(10.2%) ② '21년 반복 리콜처분 업체: 2회 리콜(14개 업체), 3회 리콜(6개 업체)

–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을 확대('21년 8.4% → '22년 20% 내외, 조사건 기준)하고,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, 여름용품,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실시할 계획

['22년 중점관리대상 품목(안)]

구분		어린이용품(17개)	생활용품(13개)	전기용품(20개)
관리 대상 (50)	유지 품목 (37)	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유모차 등 14품목	전동킥보드, 고령자용 보행차, 서랍장 등 11품목	전기매트, 전기방석, LED 등기구, 전기오븐기기 등 12품목
	신규 지정 (+13)	유아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,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등 3품목	건전지, 휴대용 사다리 등 2품목	백열등기구, 전기프라이팬, 전기그릴, 요구르트제조기, 전기스팀쿠커, 전지, 전기찜질기(직) 등 8품목

② 리콜이행 부진 업체에 대한 관리 . 감독 강화

–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('21년 55.5%)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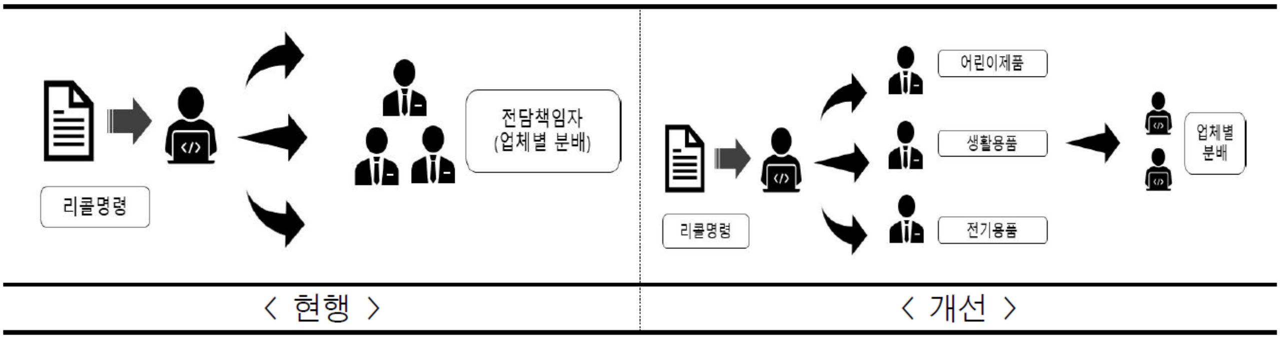
–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**6회 이상으로 확대*** 하고,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제품 수거,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

* (현행) 회수율 20 % 업체와 70 % 업체 간 점검 기준(횟수,주기) 동일 → (개선) 점검 기준 차등화

–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,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

– 직원별 전기·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전담 분야를 배정하여, 품목별 리콜/개선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

[전담책임자 배정방식]



③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

– 실시간 방송판매(라이브 커머스),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

–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, 수입자,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,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